

디아스포라 공간' 개념의 재고찰과 부산 : 이동의 시작에 주목하여*

최민경**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선행연구 검토 | 참고문헌 |
| III.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부산 | <Abstract> |
| IV. 밀항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부산 |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으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중심지로서 부산을 자리매김하고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검토한다. 부산은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모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의 시작 지점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동을 배경으로 부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융합하여 이동하는 자와 이동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해체, 재편성, 확인되는 '디아스포라 공간'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선, 1920년대의 경우, 부산은 제국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열리고도 닫힌 모순된 공간으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부산에서 조선인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현해탄을 건너는데 필수였던 도항증명서가 가지는 의미는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선명해졌으며, 이 제도는 조선인 노동자로 하여금 일본인과의 대비 속에서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인이나 학생과의 대비 속에서는 하층 노동자로서 계층적 정체성을 각인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1940년대 후반의 경우, 부산은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모국으로 귀환한 조선인이 극도의 혼란과 좌절 속에서 '밀항'을 통해 '불법'의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공간이었다. 국민국가의 경계가 개인의 삶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으로 재설정되어 가는 가운데 '밀항'은 만들어졌고, 부산은 이 밀항의 중심으로서 조선과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계가 경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시작된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검토는 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존 연구의 한계를 이해하고 개념을 재고찰 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공간, 부산, 재일코리안, 코리안디아스포라

I. 서론

일본의 식민도시 형성 과정에서 크게 발달한 부산은 특히,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부관연락선이 연결되면서 동북아 인구이동,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인구이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제국 일본이 식민지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대량 수송하기 위해 선박 취항을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 부산을 거친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인구 이동은 활발해졌다. 식민지배 초기에는 일본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식민자’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식민지배가 진행되면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192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은 뚜렷해지며, 1920년대에는 붕괴한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강제징용 등의 형태로 일본에 건너가는 조선인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인구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부산의 디아스포라 공간(diaspora space)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과정이 융합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자, 경계, 위치의 변화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¹⁾ 이 공간에서는 이동하는 자와 이동하지 않는 자의 상호관계성에 변화가 일어나며, 혼종성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 상호관계성은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떠한 측면에서 디아스포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산은 현재 일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모국을 떠난 장소이다. 부산, 부산항을 통해 이동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소위 올드커머(old comer)가 중심이다. 즉, 1980년대 이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 이미 일본에 정착한 사

1) Brah, Avtar, *Cartographies of Diaspora*, New York: Routledge, 1996, p.208.

람들로 ‘특별영주자’ 체류자격을 지닌 사람들이다.²⁾ 이들 중 대부분은 전전 1920~1930년대에 걸쳐 일자리를 찾아, 또는 강제징용이라는 형태로 부산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고, 일부는 전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밀항’의 형태로 일본에 건너갔다. 이들에게 부산은 원활한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지만, 매우 힘겨운 이동을 하게 만들거나, 아예 이동을 막아버려 훗날을 기약해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산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한반도와 일본 사이를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 나아가 조선과 일본,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 되며, 새로운 상호관계성에 기반을 두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 부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고찰, 부산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전전과 전후로 나누어 부산의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전전 부산항을 통한 일본으로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일본으로 이동 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부산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겠다. 제4장에서는 전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으로의 ‘밀항’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재발견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이다. 본래 유대인 이산의 역사에 기원을 지닌 이 개념은 글로벌화의 진행

2) 올드커머와 구분하여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외국인을 뉴커머(new comer)라고 한다.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형태의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관련지어 사용되어지는데, 블루베이커(R. Brubaker)는 이러한 현상을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한다.³⁾ 그런데 개념의 외연이 커지면 내포하는 바는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의 확산은 오히려 ‘무엇이, 누가 디아스포라 인지’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디아스포라를 어떠한 실체, 구체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시점, 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지향성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만연한 “방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 즉, 국민국가를 자연스러운 단위로 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⁴⁾

그런데 이처럼 디아스포라를 연구시점, 태도, 지향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연구의 경우, “텍스트나 이야기 분석이 주류이며, 구조적, 물질적 배경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추상적 담론 형성에 치우치고 “지식인이 가진 지적인 의식”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⁵⁾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상봉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경험을 문화와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장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실체로 인식하던 연구시점, 태도, 지향성으로 인식하던 모국과 수용국이라는 두 국민국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디아스포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브라(A. Brah)가 제시한 개념으로 “포용과 배제, 소속감과 타자성, ‘우리’와 ‘그들’의 경계들이 경합하는 지점”을 말한다.⁷⁾ 이 개념의 특징은 이

3) Brubaker, Rogers,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p.1~19.

4) Wimmer, Andreas,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2003, p.576.

5) Ong, Aihw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e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p.12~13.

6)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角」, 『한일민족문제연구』제 18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10, 118~119면.

동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는 자 또한 시야에 넣고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복수의 주체의 위치가 나란히 놓이고, 경합하며, 인정 또는 부인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디아스포라 공간에서는 이동하는 자와 이동하지 않는 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구별짓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요소가 융합하여 끊임없이 재생산, 변형된다.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기존연구에는 신지원과 이상봉의 연구가 있다.⁹⁾ 신지원은 영국의 레스터(Leicester)시, 이상봉은 일본 오사카(大阪)시 이쿠노(生野) 지역을 디아스포라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온 자와 토착민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레스터시는 영국에서 다양성과 통합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다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는 인종차별적인 분위기가 강했다는 사실이다. 신지원의 연구는 레스터시로 이동해 온 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치와 계급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들과 토착민의 상호관계성의 변화가 디아스포라 공간의 형성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밝히고 있다. 오사카시 이쿠노 지역은 재일코리안 집주 지역으로 이상봉의 연구에는 이 지역이 차별과 배제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 일본인주민과의 상호관계성의 변화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추상적인 담론을 벗어나 구체적인 장소인 디아스포라 공간에 주목하고, 이동하는 자와 이동하지 않는 자 모두를 포함하여 이들의 상호관계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배경의 영향 속에서 디아스포라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가 이동한

7) Brah, Avtar, Op. cit., p. 242.

8) Ibid., p.208.

9) 신지원, 「다문화 도시의 다양성 관리와 ‘디아스포라 공간’: 영국 레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11-1호, 전남대학교 한상문화연구단, 2017, 53-92면; 이상봉, 「디아스포라적 공간으로서의 오사카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2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12, 99-133면.

자가 도착, 정착한 곳만을 디아스포라 공간으로 설정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기존연구는 고향, 모국을 떠나 이동하여 새롭게 생활 기반을 만들며 살아가기 시작한 곳에서의 토착민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 변용의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이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의 문제는 침묵한 채로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¹⁰⁾ 알렉산더(C. Alexander)는 특히,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방향성은 남북 격차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며, 지구의 북반구와 서반구에 있는 이동하는 자가 도착하는 ‘부유한’ 도시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즉, 이동이 시작되는 곳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남반구 내부에서도 활발히 일어나며,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근시안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알렉산더는 도착한 곳뿐만이 아니라 출발하는 곳에서 디아스포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동성과 비이동성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¹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풀어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브라의 정의를 계승하되, 디아스포라 공간은 이동하는 자가 정착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부산에 대입시켜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의 부산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일제 강점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 간 조선인은 당초 일본 체류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일본 패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혼란 속에서 한반도 귀환은 점차 미뤄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정착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패전 이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은 ‘밀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바로 부산은 이렇

10) Alexander, Claire, “Beyond the ‘The “Diaspora” Diaspora’: A Response to Rogers Brubaker”, *Ethnic and Racial Studies* 40(9), 2017, p.1548.

11) *Ibid.*, pp. 1547~1549.

계 일본으로 건너 가 정착한 코리안 diaspora의 이동이 시작된 지점이자 diaspora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앞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선행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Ⅲ. 코리안 diaspora의 형성과 부산

1. 부산을 통한 조선인의 도일

부산, 부산항은 일본이 대륙 진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 일본에서 한반도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식민지배가 진행되면서 점차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의 몰락 때문이었다.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조선의 농촌은 대부분 일본인 지주에게 넘어갔고, 많은 수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주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조선인 소작농 중에는 농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본으로의 이동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국으로서의 세력 확대 과정과 제1차 세계 대전 등을 겪은 호황 속에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조선에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인 농촌의 몰락과, 일본에서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인 노동력 부족이 함께 작용하여 191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 간 조선인의 절반 가까이는 경상남도 출신이었고, 그 뒤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었는데, 이들 지역을 떠난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 바로 부산이었다.¹²⁾ 박수경은 1920년대 부산은 정

12)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부산을 거쳐 이루어졌음은 1934년 조선총독부 경보국이 발행한 『고등경찰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1933년 8월 도일한 조선인이 이용한 항구의 76.2%는 부산으로, 제주 12%, 여수 8.9%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도노무라 마사루, 신유원

주성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곳이었다고 설명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호당 구성원 수가 적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체류하는 단신 이주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분석한다.¹³⁾ 물론 호당 구성원 수가 적다는 점이 이동성을 곧바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은 일본으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부산에 유입한 단신 이주자 중 일부는 통계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일시적인 정주성은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정주성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만약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서 부산으로 이동해 온 농민들이 부산항을 통해 원활하게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이들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존재를 통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일본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부산, 그 중에서도 부산항 근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도항규제제도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은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 알선하는 일본 업체의 등장으로 이어졌는데, 무분별한 알선으로 인해 독일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자 1918년 조선총독부는 ‘노동자 모집 단속 규칙(勞働者募集取締規則)’을 공포, 시행한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알선하는 일본 업체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일본으로 건너가는 노동자가 거주지 경찰서에서 신원을 보증 받고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으로의 도항규제는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해 보다 강화되었다. 독립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일본은 조선인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 하는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위 여행증명서 제도이다. 여행증명서 제도는 일본을 포함하여 조선 밖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조선인은 거주지 경찰서에서 여행 목적과 이유가 포함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발지 경찰서에 제출하고, 귀국 후에도 동일하게 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 제도는 물론 많은 조선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3.1. 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위시하던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곧 폐지되었다. 그러나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을 거치면서 조선인,

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서울: 논형, 2010, pp.65-66).

13) 박수경, 「식민도시 부산의 이동성 고찰: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5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p.398.

그 중에서도 노동자의 도일은 기존의 여행증명서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보다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조선인 중, 이전에 일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상당한 여비를 소지하며, 취업할 곳이 확실하게 정해져있는 사람만 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교부받아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일관되게 실시된 것이 아니라 내무성과 조선 총독부의 공조 속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¹⁴⁾ 도일을 희망하는 조선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압축되어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부산이었다. 191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경제의 몰락은 각종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농민의 노동자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는 이렇게 증가한 노동자를 흡수할 만큼의 산업기반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조선인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산에는 실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일을 시도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들의 존재가 점차 부산 지역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산, 구체적으로 부산항은 “일본으로 향한 열린 길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막힌 길”이기도 하였던 것인데,¹⁵⁾ 1924년 5월 부산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적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도일 방법을 모색하며 적게는 수 일, 많게는 수개월을 부산에 머물렀으며, 그동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었던 부산항에서의 경험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는 모국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에서의 경험, 즉, 출발하는 곳에서의 경험이 된다.

14) 1919년 도입된 여행증명서 제도가 1922년 폐지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제도 없이 도항 규제가 이루어졌다. 관동대지진 직후부터 3개월 간 도일은 전면 금지되었고, 1923년 12월 전면 금지가 해제 후에는 1924년 6월부터는 거주지 경찰 발행 호적등본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는 도항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 일본어 능력, 여비 등이 자의적으로 추가되기도 하였다. 1928년에 들어서는 거주지 경찰 발행 호적등본 뒤에 소개장을 받아 부산 수상경찰서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1920년대 내내 도일 규제는 변동이 심했다.

15) 박수경, 앞의 글, 401면.

2. 좌절과 정체성 각인의 공간으로서의 부산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으로의 도항은 실제로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나, 여행증명서 폐지 이후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한 기대가 절정에 달해 표출되는 곳이 부산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 부산항은 일본은 향하여 열리고도 닫힌 모순된 공간이었으며, “오도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곤난을 겪는”¹⁶⁾ 혼돈의 공간, “전쟁 기분이 나타나는”¹⁷⁾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어용단체로 이루어진 도항알선업체였다. 부산에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조선인이 적체했던 이유는 단지 도항이 통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통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거주지 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 즉, 호적등본과 소개장을 교부받지 못한 조선인들의 경우, 부산수상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받으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부산은 도일의 좌절과 그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부산수상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상애회(相愛會), 부산노동공제회 등 도항알선업체를 거쳐야만 했다. 이들은 가입비, 도항 및 직업 알선 수수료 이외에도 뇌물을 줘야만 부산수상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협잡배들이 준동하여”¹⁸⁾ 부산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상황에 대하여 1924년 5월 22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알선업체]¹⁹⁾ 간부에게 다소의 금전 혹은 물품의 뇌물을 한 후에야 겨우 도항 케됨으로 사소의 여비를 간신히 변통하여 도일하여든 노동자는 거류양난의 경우를 당하여 중로방황을 필경 면치 못하니 노동자의 참상은 가히 형언키 어렵도다. (중

16) 「道當局防止로 進退維谷의 身勢, 釜山驛頭의 渡日同胞」, 『동아일보』, 1925. 10. 22.

17) 「釜山棧橋戰爭氣分, 노동자의 도일 방지로 인하여」, 『시대일보』, 1926. 3. 7.

18) 「釜山一帶 混亂狀態, 渡日沮止와 挾雜輩蠢動」, 『시대일보』, 1926. 3. 19.

19) 본 연구의 인용문에서 ‘[]’의 내용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분이다.

략) 약간의 임금으로 생명을 유지할가하여 독일코저하나 기생물의 간악한 계획으로 이 또한 용이치 못하여(후략)²⁰⁾

부산수상경찰서에서 도항증서는 받는 것이 고향을 떠나 온 조선인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위의 기사에서 “기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알선 업체는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실제 도항을 성공시키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결과적으로 도항증서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길어졌으며, 도중에 체류비용이 떨어지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용직 등을 하며 유랑,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가장 흔한 범죄는 사기였으며 이는 도일에 대한 희망을 노린 것으로 다음은 한 여관 주인에 의한 도일 사기 기사이다.

러비로 가지고 잇는 돈 삼십어원은 그 러관 주인 권병옥이가 방갑으로 미리 바다 버리고 발동괴선으로나 상선으로 가도록해주마하고서 차일피일 끌어들어가며서 이 달 십칠일에 이르기까지에 감금이나 다름엄시 이층한구석방에 가두어두어²¹⁾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부산에 적체된 조선인 노동자는 사회 문제로 부상한다.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부산에 남아 빈민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1938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도일하지 못한 조선인 노동자가 부산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부산도시 생성에 일대 오점으로 되어지는 부산부내 산기슭에 움막사리와 주택은 하층계급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여실이 표현하고 있어 보는자로 하여금 탄식을 금할 수 없을 만치 보기실케 나렬되어 있으므로(중략) 이들 하층 계급의 생활하는 무리는 모두 내지도항을 목적코 부산에 와서 오도가도 못하여 부득히 산기슭에 움막을 맨 자(후략)²²⁾

20) 「釜山市民大會, 雲集된 勞働者四千餘名 慘憺에서 彷徨」, 『동아일보』, 1924. 5. 22.

21) 「一家族六名이 渡航沮止로 彷徨, 려관업자에 속아 러비만 소비 釜山水上署가 宿主取調」, 『동아일보』, 1930. 3. 2.

22) 「大釜山建設의 汚點인 不良家屋 一掃方針」, 『동아일보』, 1938. 9. 12.

이처럼 부산은 일본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좌절을 안겨주는 공간이었다. 부산수상경찰서에서 도항증명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희망고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단과 방법조차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박수경은 이와 같은 부산항의 상황을 “벌거벗은 생명의 장”이라고 표현한다.²³⁾ 아감벤(G. Agamben)에 의하면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은 주권 권력에 의해 배제됨으로써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 모순적인 존재로, 권력은 이들의 생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이를 통해 사회의 생명질서를 유지한다.²⁴⁾ 박수경은 도일이 좌절되고 부산에 남아 빈민으로 전락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바로 이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주장한다.²⁵⁾ 부산수상경찰서에 의해 임의적으로 도일 가능 여부가 판단되고, 대부분의 경우, 도일하지 못하였으며, 실업자, 빈민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체적으로는 부산부(府), 경상남도에 의해 방치됨으로써 사회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산은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이 집적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벌거벗은 생명의 장”이었던 부산은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스스로의 정체성, 바꾸어 말하자면, 조선인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조선인으로서 느끼는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이며, 둘째는 하층 노동자로서 느끼는 계층적 정체성이다. 전자의 경우, 도항증명서 없이 부관연락선을 자유롭게 오르는 일본인과의 대비 속에서 각인되었고, 후자의 경우, 비교적 도항증명서를 얻는 것이 용이했던 조선인 학생 및 상인과의 대비 속에서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산항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이동’을 매개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가 융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민족적, 계층적 구별짓기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디아스포라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3) 박수경, 위의 글, 404면.

24)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45~52면.

25) 박수경, 위의 글, 408-412면.

IV. 밀항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부산

1. 밀항을 통한 일본으로의 이동

1920, 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의 결과,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수는 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붕괴는 이들의 모국귀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을 촉진시켰다. 피식민지 출신자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강제징용 등의 형태로 ‘원치 않게’ 도일한 조선인들은 일본 패전 직후부터 규슈(九州)지역 항구에 모여 들어 한반도로의 귀환을 서둘렀다. 이들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일본에 귀환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던 인양선을 ‘거꾸로’ 타고 한반도로 돌아갔으며, 그 수는 1946년 3월까지 약 130만 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남은 약 70만 명의 일본 거주 조선인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이들도 대부분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여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GHQ(연합부 최고사령부; General Headquarter)가 실시한 귀환자 등록을 통해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귀환 시, 일본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는 재산을 제한하는 조치에 의해 실제 모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인의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 직후, 귀환을 서둘렀던 사람들은 강제징용 등에 의해 도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1946년 3월 이후에도 일본에 남아있었던 조선인들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도일하여 일본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생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경우, 재산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해 귀환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반출 재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미루고’ 일본에 체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제국 붕괴로 인한 조선인의 이동은 주로 일본에서 한반도를 향해 이루어졌지만, 이를 역행하는 흐름, 즉, 한반도에서 일본을 향한 이동 또한 존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이동이 ‘밀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밀항’은 “국가와 개인의 삶이 충돌하고 길항하는 현장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근원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²⁶⁾ 194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밀항’의 주체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이었다. 일본의 패전 직후, 모국에 귀환한 사람들이 ‘재도일’하는 형태였던 것인데, 이들은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밀항’을 선택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적 층위의 도덕률 같은 것은 무시하면서 국가-영토 바깥을 향해 어둡게 번지고 퍼지는 하나의 삶-선택의 가능성”으로서 ‘밀항’이 존재했던 것이다.²⁷⁾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서의 조선인의 이동은 ‘밀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 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불명확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인[조선인]이 어느 국가에 속(해야)하는지조차 일본 내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²⁸⁾ GHQ와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들을 외국인(=조선인) 또는 일본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일단 모국에 귀환한 후, ‘재도일’ 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유동적이었으며, ‘밀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바뀌어 조선인의 ‘재도일’이 ‘밀항’화(化)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1946년 5월에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콜레라였다.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GHQ와 일본 정부는 모국으로 귀환한 ‘비일본인’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금지하였고 조선인의 ‘재도일’은 순식간에 ‘불법’이 되어버렸다.

1946년 GHQ는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이유로 ‘불법 입국 억제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不法入国の抑制に関する総司令部覚書)’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본 정부에 송부한다. 이 각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항구에 불법적으로 입항하는 배를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러한 배를 발견하면 선원, 승객, 화물과 함께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압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6)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_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313면.

27) 김예림, 위의 글, 311면.

28) 박사라, 「조선인을 식별하다: 점령기 ‘조선인’과 ‘불법 입국’의 정의에 관하여」, 권혜태·이정은·조경희 편,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7, 79면.

그리고 이와 같은 GHQ의 각서에 따라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밀항자의 적발과 송환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946년 후반부터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사가(佐賀), 시마네(島根), 돗토리(鳥取) 등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점령군, 경찰, 그리고 어업조합 등 민간인의 협조 속에서 ‘밀항’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46년 ‘불법 입국’으로 검거된 조선인은 약 18,000여명에 육박하였고, 단속 활동의 영향으로 1947년에는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1949년에는 8,302명의 밀항자가 검거되었다.²⁹⁾ 이와 더불어 밀항이 발각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 수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94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비정규 루트”³⁰⁾는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활발하게 가동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밀항’의 활성화를 야기한 거시적인 배경은 물론 한반도 정치, 경제의 불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인에게 ‘밀항’을 가능하게 했던 미시적인 요인은 여전히 일본에 남아서 생활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였다.³¹⁾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를 발생,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로, 그 중에서도 수용국에 가족 및 친족, 지인이 거주하여 초기 단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이다. 더군다나 ‘밀항’처럼 ‘불법’인 이동 방식을 택할 경우, 도착한 곳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의 네트워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비정규루트”에 의한 이동은 귀국을 ‘미루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가족 및 친족, 지인의 존재로 인해 촉진되었다.

2. 방황과 ‘경계 넘기’ 공간으로서의 부산

위와 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1940년대 후반의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불법’ 이동의 중심에는 부산이 있었다. 박사라에 따르면 이 시기 조선인의 일본으

29) 法務省入国管理局, 『出入国管理とその実態』, 東京: 大蔵省印刷局, 1959, p.58.

30) 도노무라 마사루, 앞의 책, 394면.

31) 위의 책, 394-396면.

로의 ‘밀항’의 중심지는 현해탄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쪽과 쓰시마, 규슈 북부 지역이었다.³²⁾ 이는 물론 지리적인 인접성을 생각하였을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사회적 원인도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부산은 일본 패전 후, 일본을 비롯하여 일본 제국의 ‘세력권’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귀환하여 가장 먼저 밟는 모국의 땅 중 하나였다. 그런데 부산항을 통해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들 중에는 가족과의 소식 두절 등의 이유로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부산에 남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이 땅 백성들이 살길을 찾아 몰려나가던 정반대로 해방된 오늘날 몰려나갔던 그들은 조국을 향해 부산항으로 몰려든다. (중략) 이들 중에 갈 곳이 없어 부산에 남아 있는 수가 20만 명이나 되며 부산항은 인구가 급작히 증가됨에 따라서 주택난, 식량공핍, 물가폭등, 일화교환을 싸고 도는 온갖 범죄와 대일 밀수출의 최악상과 치안질서문란, 염병창궐, 실업자문제 등 그 해결에 시급을 요하는 온갖 사회문제가 교차되는 가운데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³³⁾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은 1920, 30년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형성기에 있어서도 인구 적체 현상과 그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1940년대 후반에도 매우 유사하게 재현되었으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와 달리 동일규제와 같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삶의 붕괴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 7월 9일 민주중보에 “부산 직업소개소에 반영된 사회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실업자의 대부분이 “전재 동포(戰災同胞)”이며 직업소개소 통해서는 20명 중에 1명,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구직자 100명 중 1명 정도만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³⁴⁾ 이처럼 부산은 귀환 조선인들에게 반가운 모국 땅이기 이전에 실업 및 빈곤과 마주하고 방향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32) 박사라, 앞의 글, 81~82면.

33) 『戰災 귀환동포 20만 부산 잔류』, 『조선일보』, 1946. 2. 11.

34) 『부산 직업소개소에 반영된 사회상』, 『민주중보』, 1949. 7. 9.

방법 중 하나가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는 것이었다. 실업, 빈곤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해탄을 건너는 이동이 부상하게 되는 것인데, 패전을 통해 일본 경제도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월등하게 양호하다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과거 일본에서 일자리와 수입을 얻었던 경험, 그리고 아직 체류하고 있는 가족 및 친족, 지인의 존재는 이동의 결심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46년 하반기가 되면 GHQ와 일본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애매한 상태에서 ‘비일본인’의 일본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하고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이동은 많은 경우 ‘불법’이 되어버린다. ‘밀항’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밀항’은 일본 패전 이후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의 시기에 걸쳐 일본 거주 조선인 집단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신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한 이동 양상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제국의 붕괴 후,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남은 조선인에 의해 원형이 형성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1940년대 후반의 ‘밀항’을 통한 한반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통해 사회집단으로 확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밀항’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간 사람들에게 부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밀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초 ‘밀항’은 모국에 돌아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으로 여겨져, 다음 신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항자도 동정의 대상이었다.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모른체 하고 눈을 가린다 해도 어두운 바닷물결 속으로 건너가는 딱한 동포들의 아우성소리가 어찌 그대의 고막을 울리지 않고 배기라 아무리 눈을 감아도 불현 듯이 떠오르고야마는 이 땅의 모든 서름을 독차지한 듯한 밀항하는 이들 동포의 창백한 얼굴 그 영상을 어찌하랴³⁵⁾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정치적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밀항’에 대한 여론은 크게 바뀐다.

35) 「생활문제로 조선인들 일본에 밀입국」, 『서울신문』, 1946. 8. 20.

밀항! 일찍이 왜놈들의 폭압속에서 나온 이 술어가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이 땅에 또다시 부활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전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완전 자주통일 민주국가 건설에 총진군하여야 할 우리 동포가 무엇 때문에 밀항이란 가시길을 또다시 더듬어야 할 것인가³⁶⁾

위와 같이 1948년이 되면 ‘밀항’은 국가, 민족적 과업을 뒤로 한 채 떠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기 시작하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란의 현실을 등지고 일신만의 안일과 허영의 꿈³⁷⁾에 사로잡힌 행위로 치부된다.

그리고 이러한 ‘밀항’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 속에서 그 중심지였던 부산은 확정되어 가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시기 ‘밀항’은 “제국과 국가에 의해 삶의 가능성을 훼손당한 자들이 선택한 ‘위험’”이었다.³⁸⁾ 제국의 붕괴 후 국민국가의 형성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양상은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불법’일 수밖에 없었다. ‘밀항’은 폭력적인 국민국가의 경계 짓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부산은 바로 이러한 경계의 폭력성과 더불어 경계 넘기의 역동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부산은 ‘밀항’을 시도하던 조선인들, 나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조선과 일본의 경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계가 개인의 삶, 생존 앞에서는 거부하고 넘어야 하는 대상으로 존재함을 느끼고 행동하게 한 공간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산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1920, 30년대와는 다른 형태와 의미의 ‘이동’을 매개로 디아스포라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의 융합 속에서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개인의 삶과 어떻게 괴리되는지는 인식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이었다.

36) 「일본 밀항자 격증」, 『서울신문』, 1948. 6. 23.

37) 「정부, 일본 밀항자를 엄중 처벌할 것임을 발표」, 『서울신문』, 1952. 9. 11.

38) 김예립, 앞의 글, 314면.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으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중심지로서 부산을 자리 매김하고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부산은 오늘날 소위 ‘올드커머’라고 불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모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의 시작 지점이었다. 전전에는 1920년대, 몰락한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이 노동자가 되어 도일한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는 강제 징용의 형태로 많은 조선인이 부산에서 현해탄을 건넜다. 전후에는 194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부산에서는 ‘밀항’이라는 형태로 일본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동을 배경으로 부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융합하여 이동하는 자와 이동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해체, 재편성, 확인되는 ‘디아스포라 공간’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30년대 강제 징용에 의한 이동은 완전한 비자발적 이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1920년대와 194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부산의 ‘디아스포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0년대의 경우, 부산은 제국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열리고 닫힌 모순된 공간으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부산에서 조선인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현해탄을 건너는데 필수였던 도항증명서가 가지는 의미는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선명해졌으며, 이 제도는 조선인 노동자로 하여금 일본인과의 대비 속에서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인이나 학생과의 대비 속에서는 하층노동자로서 계층적 정체성을 각인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1940년대 후반의 경우, 부산은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모국으로 귀환한 조선인이 극도의 혼란과 좌절 속에서 ‘밀항’을 통해 ‘불법’의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공간이었다. 국민국가의 경계가 개인의 삶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으로 재설정되어 가는 가운데 ‘밀항’은 만들어졌고, 부산은 이 밀항의 중심으로서 조선과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계가 경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공간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논의는 부산을 통해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개념을 재고찰

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에서 탈피하여 연구시점, 태도로서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연구 경향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장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단, 디아스포라 공간 개념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이동의 끝, 바꾸어 말하자면, 정착한 장소에만 주목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동의 시작 장소에서 또한 이동을 매개로 하여 ‘우리’와 ‘그들’의 경계의 확인, 재구성, 소멸이 이루어짐은 분명하다. 그리고 부산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시작된 공간으로서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공간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이해하고 개념을 재고찰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물론 본 연구는 특정 시기의 부산만을 다루고 있어 디아스포라 공간 개념의 보다 종합적인 재고찰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요코하마(横浜) 및 고베(神戸), 광저우(广州), 샤먼(廈門) 등 동북아 지역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시작이 이루어진 디아스포라 공간에 대한 검토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 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 박수경, 「식민도시 부산의 이동성 고찰: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5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 신지원, 「다문화 도시의 다양성 관리와 ‘디아스포라 공간’: 영국 레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11-1호, 전남대학교 한상문화연구원, 2017.
-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研究: 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角」,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8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10.
- 이상봉, 「디아스포라적 공간으로서의 오사카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 『한일민족

문제연구』 제22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12.

단행본

박사라, 「조선인을 식별하다: 점령기 ‘조선인’과 ‘불법 입국’의 정의에 관하여」, 권
혁태·이정은·조경희 편,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서울: 한
올아카데미, 2017

번역서 및 외국논저

도노무라 마사루,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서울:
논형, 2010.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法務省入国管理局, 『出入国管理とその実態』, 東京: 大蔵省印刷局, 1959.

Alexander, Claire, “Beyond the ‘The “Diaspora” Diaspora’: A Response to Rogers
Brubaker”, *Ethnic and Racial Studies* 40(9), 2017.

Brah, Avtar, *Cartographies of Diaspora*, New York: Routledge, 1996.

Brubaker, Rogers,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Ong, Aihw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e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Wimmer, Andreas,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2003.

기타자료

「釜山市民大會, 雲集된 勞働者四千餘名 慘憺에서 彷徨」, 『동아일보』, 1924. 5. 22.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1. 30)

「道當局防止로 進退維谷의 身勢, 釜山驛頭의 渡日同胞」, 『동아일보』, 1925. 10.

22.

「釜山棧橋戰爭氣分, 로동자의 도일 방지로 인하여」, 『시대일보』, 1926. 3. 7.

「釜山一帶 混亂狀態, 渡日沮止와 挾雜輩蠢動」, 『시대일보』, 1926. 3. 19.

「一 가족六名이 渡航沮止로 彷徨, 려관업자에 속아 려비만 소비 釜山水上署가 宿主
取調」, 『동아일보』, 1930. 3. 2.

「大釜山建設의 汚點인 不良家屋 一掃方針」, 『동아일보』, 1938. 9. 12.

「戰災 귀환동포 20만 부산 잔류」, 『조선일보』, 1946. 2. 11.

「생활문제로 조선인들 일본에 밀입국」, 『서울신문』, 1946. 8. 20.

「일본 밀항자 격증」, 『서울신문』, 1948. 6. 23.

「부산 직업소개소에 반영된 사회상」, 『민주중보』, 1949. 7. 9.

「정부, 일본 밀항자를 엄중 처벌할 것임을 발표」, 『서울신문』, 1952. 9. 11.

<Abstract>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Diaspora Space’ and Busan: Focusing on the starting point of migration

Choi Minkyung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diaspora space’ is critically reconsidered through a case of Busan, where had been the center of Korean Diaspora 's migration to Japan. Busan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Korean Diaspora’s migration to Japan and their settlement. In the background of this migration flow, Busan has become ‘diaspora space’ where diverse fa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onverge, and the boundary between those who move and those who do not move, and nation and state have been dismantled, rearranged and confirmed. In the 1920s, Busan was an open and closed contradictory space for moving to the center of the empire. And in Busan, the Korean Diaspora once again confirmed the meaning of living as a Korean manual worker.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e travel authorization which was essential for crossing the Genkai Sea, became clearer in Busan. This system made the Korean manual workers to recognize the ethnic identity in comparison with Japanese, and the class identity in comparison with businessmen and student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40s, Busan was a space where the Korean who returned to their homelands with the collapse of the empire attempted to 'cross the boundary' 'illegally' through 'stowaway' in extreme confusion and frustration. As the border of the nation-state had been reset violently irrespective of the individual 's life, 'stowaway' has been created. Busan was the center of this 'stowaway' as well as the diaspora space where the boundary between Chosun and Japan, Korea and Japan confronted and overcame. This study of Busan as the diaspora space where the migration of Korean diaspora started is meaningful as an example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to review the concept.

Keywords : Diaspora, Diaspora Space, Busan,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 Diaspora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 11. 30)

논문접수일 : 2018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 : 2018년 11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09일

K C I